

#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(임호선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7639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1. 20.

발 의 자 : 임호선 · 박정현 · 정준호  
김동아 · 문대림 · 복기왕  
이연희 · 안태준 · 고민정  
권칠승 · 임미애 의원  
(11인)

## 제안이유

현행법은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 사항이나 사진 등을 신문 등 출판물에 실거나 방송매체를 통하여 방송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피해자의 성명과 결합된 아동학대범죄 관련 사건명 또는 법률명이 통용되고 있어,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및 해당 성명에 대한 편견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상황임.

또한 현행법에 따르면 임시조치는 검사를 경유하여 법원에 청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임시조치는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위험예방활동이므로 신속한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경찰에서 검사를 경유하지 않고 법원에 직접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. 또한, 아동학대 범죄 발생 이전이라도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‘발생할

우려'가 있다면 임시조치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. 아울러, 긴급임시조치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수단이 과태료 밖에 없어 실효성 확보를 위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피해자의 성명 등 피해자를 연상할 수 있는 단어를 결합한 아동학대범죄 관련 법률명 또는 아동학대범죄 사건명을 신문 등 출판물에 실거나 방송매체를 통하여 방송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, 경찰에서 수사 종결하는 사안이라도 아동학대 가해자 성행교정을 위해 직접 법원에 보호사건으로 송치하도록 하여 아동보호를 강화하고자 함.

### 주요내용

- 가. 임시조치의 청구 주체에 '사법경찰관'과 '보호관찰관'을 추가하고, 아동학대 범죄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도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2조제3항, 제14조제1항, 제14조제2항, 제14조제3항, 제15조제1항, 제15조제2항, 제15조제3항, 제19조제7항).
- 나. 긴급임시조치의 요건으로 아동학대범죄의 '재발'을 '발생'으로 수정하고, 긴급임시조치 사항에 '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'를 할 수 있도록 함(제13조제1항).
- 다. 임시조치 접근금지는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해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를 하도록 함(안 제19조제1항제2호).
- 라. 사법경찰관이 수사한 사건 중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함(안 제24조).

- 마. 사법경찰관이 검찰에 불송치하는 사건 중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아동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함(안 제27조제1항, 제28조제1항, 제28조제2항, 제28조제3항, 제41조).
- 바. 피해자의 성명 등 피해자를 연상할 수 있는 단어를 결합한 아동학대범죄 관련 법률명 또는 아동학대범죄 사건명을 신문 등 출판물에 실거나 방송매체를 통하여 방송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, 위반 시 과태료 부과를 부과하고자 함(안 제27조제1항, 제28조제1항, 제28조제2항, 제28조제3항, 제41조 등).
- 사. 정당한 사유 없이 긴급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도록 함(안 제59조제3항, 제63조제1항제4호).



##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제4항 중 “검사가”를 “사법경찰관이”로 한다.

제13조제1항 중 “재발될”을 “발생할”로, “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”를 “제19조제1항제1호·제2호·제3호 및 제7호”로 한다.

제14조제1항 중 “검사는 아동학대범죄가 재발될”을 “검사, 사법경찰관 또는 보호관찰관은 아동학대범죄가 발생할”로, “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이나 보호관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”을 “법원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청구 또는 그 신청을”을 “청구를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사법경찰관”을 “검사 또는 사법경찰관”으로, “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검사 및”을 “청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”으로 한다.

제15조제1항 중 “검사에게”를 “법원에”로, “임시조치의 청구를 신청”을 “임시조치를 청구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“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검사는”을 “제1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이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사법경찰관은 검사가 제2항에 따라 임시조치를 청구하지 아니하거나”를 “사법경찰관은”으로 한다.

제19조제1항제2호 중 “가정구성원의 주거,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에서”를 “가정구성원에 대한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7항 중 “검사”를 “검

사, 사법경찰관”으로 한다.

제24조 전단 중 “사건을”을 “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건을”로 하고, 같은 조 후단을 삭제한다.

제27조제1항 중 “검사는”을 “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”으로 한다.

제28조의 제목 “(검사의 송치)”를 “(아동보호사건의 송치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“검사는”을 각각 “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”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사법경찰관이 제1항에 따라 아동보호사건으로 사건을 관할 법원에 송치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

제35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④ 피해자의 성명 등 피해자를 연상할 수 있는 단어를 결합한 아동학대범죄 관련 법률명 또는 아동학대범죄 사건명을 신문 등 출판물에 실거나 방송매체를 통하여 방송할 수 없다.

제4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검사”를 “검사, 사법경찰관”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3. 제28조에 따라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사건인 경우에는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송치

제59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제1항에 따른 긴급임시조치(제19조제1항

제7호에 따른 유치장예의 유치는 제외한다)를 이행하지 아니한 아동학대행위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.

제63조제1항제4호를 삭제하고,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한다.

제63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제35조제4항을 위반하여 신문 등 출판물에 법률명 또는 사건명을 실거나 방송매체를 통하여 방송한 사람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제35조제4항 및 제6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피해자를 연상할 수 있는 단어가 결합된 사건명 또는 법률명이 출판물에 실리거나 방송된 경우부터 적용한다.



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2조(피해아동 등에 대한 응급 조치) ① ~ ③ (생략)	제12조(피해아동 등에 대한 응급 조치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<u>검사가</u> 제15조제2항에 따라 임시조치를 법원에 청구한 경우에는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 시까지 응급조치 기간이 연장된다.	④ ----- <u>사법경찰관이</u> ----- ----- ----- -----.
⑤ ~ ⑧ (생략)	⑤ ~ ⑧ (현행과 같음)
제13조(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긴급임시조치) ① 사법경찰관은 제12조제1항에 따른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범죄가 <u>재발될</u> 우려가 있고, 긴급을 요하여 제19조제1항에 따른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직권이나 피해아동등, 그 법정대리인(아동학대행위자를 제외한다. 이하 같다), 변호사(제16조에 따른 변호사를 말한다. 제48조 및 제49조를 제외하고는 이하 같다), 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의 신청에 따	제13조(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긴급임시조치) ① ----- ----- ----- <u>발생할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
라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.

②·③ (생략)

제14조(임시조치의 청구) ① 검사는 아동학대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이나 보호관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제19조제1항 각 호의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.

② 피해아동등, 그 법정대리인, 변호사, 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의 청구 또는 그 신청을 요청하거나 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

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검사 및 임시조치를 요청한 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.

제15조(응급조치·긴급임시조치

--제19조제1항제1호·제2호·제3호 및 제7호-----  
-----.

②·③ (현행과 같음)

제14조(임시조치의 청구) ① 검사, 사법경찰관 또는 보호관찰관은 아동학대범죄가 발생할 법원-----  
-----  
-----.

②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청구를 -----  
-----  
-----.

③ -----  
검사 또는 사법경찰관-----  
----- 청구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-----  
-----  
-----.

제15조(응급조치·긴급임시조치

③ 사법경찰관은 검사가 제2항  
에 따라 임시조치를 청구하지

③ 사법경찰관은 -----

아니하거나 법원이 임시조치의 결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그 긴급임시조치를 취소하여야 한다.

제19조(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) ①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원활한 조사·심리 또는 피해아동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아동학대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(이하 “임시조치”라 한다)를 할 수 있다.

1. (생 략)
2.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,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
3. ~ 7. (생 략)
- ② ~ ⑥ (생 략)
- ⑦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를 결정한 경우에는 검사, 피해아동등, 그 법정대리인, 변호사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 및 피해아동등을 보호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통
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제19조(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) ①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1. (현행과 같음)
2. ----- 가정구성원에 대한 -----  
-----
3. ~ 7. (현행과 같음)
- ② ~ ⑥ (현행과 같음)
- ⑦ -----  
-----검사, 사법경찰관, -----  
-----  
-----

지하여야 한다.

⑧ ~ ⑨ (생략)

제24조(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)   
사법경찰관은 아동학대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해당 사건을 아동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 지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.

제27조(아동보호사건의 처리) ① 검사는 아동학대범죄로서 제26조 각 호의 사유를 고려하여 제36조에 따른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다.

② (생략)

제28조(검사의 송치) ① 검사는 제27조에 따라 아동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을 제18조제1항에 따른 관할 법원(이하 “관할 법원”이라 한다)에 송치하여야 한다.

② 검사는 아동학대범죄와 그 외의 범죄가 경합(競合)하는 경

-----.

⑧ ~ ⑨ (현행과 같음)

제24조(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) -  
-----  
-----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건을 ----- . <후단 삭제>

제27조(아동보호사건의 처리)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28조(아동보호사건의 송치)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---  
-----

우에는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사건만을 분리하여 관할 법원에 송치할 수 있다.

## <신 설>

제35조(비밀엄수 등의 의무) ①  
~ ③ (생략)

## <신 설>

제41조(보호처분의 취소) 법원은 보호처분을 받은 아동학대행위자가 제36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호처분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에 따르지 아니하면 직권 또는 검사, 피해아동, 그 법정대리인, 변호사, 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, 보호관찰관이나 수탁기관의 장의 청구에 의

\_\_\_\_\_

\_\_\_\_\_

\_\_\_\_\_

③ 사법경찰관이 제1항에 따라 아동보호사건으로 사건을 관할 법원에 송치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

제35조(비밀엄수 등의 의무) ①  
~ ③ (현행과 같음)

④ 피해자의 성명 등 피해자를  
연상할 수 있는 단어를 결합한  
아동학대범죄 관련 법률명 또  
는 아동학대범죄 사건명을 신  
문 등 출판물에 실거나 방송매  
체를 통하여 방송할 수 없다.

제41조(보호처분의 취소) -----

-----검사, 사법경찰관, -----

-----검사, 사법경찰관, -----

하여 결정으로 그 보호처분을 취소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.

1. 2. (생략)

<신설>

제59조(보호처분 등의 불이행죄)

① 2. (생략)

<신설>

③ (생략)

제63조(과태료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1. 3의2. (생략)

4.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제1항에 따른 긴급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

-----  
-----  
-----.

1. 2. (현행과 같음)

3. 제28조에 따라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사건인 경우에는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송치

제59조(보호처분 등의 불이행죄)

① 2. (현행과 같음)

③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제1항에 따른 긴급임시조치(제19조제1항제7호에 따른 유치장에의 유치는 제외한다)를 이행하지 아니한 아동학대행위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.

④ (현행 제3항과 같음)

제63조(과태료) ① -----

-----  
-----  
--.

1. 3의2. (현행과 같음)

<삭제>

<p><u>5. · 6.</u> (생 략)</p> <p><u>&lt;신 설&gt;</u></p> <p><u>②</u> (생 략)</p>	<p><u>4. · 5.</u> (현행 제5호 및 제6호와 같음)</p> <p><u>② 제35조제4항을 위반하여 신 문 등 출판물에 법률명 또는 사건명을 실거나 방송매체를 통하여 방송한 사람에게는 300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다.</u></p> <p><u>③</u> (현행 제2항과 같음)</p>
---	--